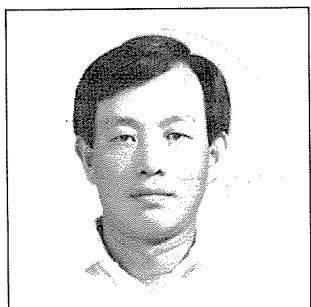


# 에너지政策 問題는 없는가



徐廷熙  
(서울대工大교수·資源工學)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구사항은 衣, 食, 住의 문제이고, 이 衣, 食, 住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資源 및 에너지 문제의 해결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기본적인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현재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명 및 문화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현재 페르시아만에서 이라크와 미국을 위시한 다국적군간에 전쟁이 수행되고 있고 온 세계가 이 전쟁의 진행사항을 숨죽이며 초조하게 지켜보는 이유가 무엇인가? 만약 이와 같은 전쟁이 아프리카 또는 남미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났어도

같은 관심을 끌 수 있었겠는가? 다시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페르시아만의 전쟁이 그토록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곳에 부존되어 있는 막대한 유전과 이 유전의 향방이 전세계의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인 것이다.

에너지-특히 석유와 관련된 국제적인 분쟁이 에너지 위기 또는 에너지 충격으로 전세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우리나라도, 또 우리 국민들도 이미 1973년의 제1차 석유파동과 1979년의 제2차 석유파동의 경험을 통해서 충분히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정부도 그때부터 장기적인 각종 에너지 정책들을 입안하여 수행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현재도 재작년에 존폐마저 논란되었지만 동력자원부를 위시하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대한석탄공사, 석유개발공사 등이 건재하고 있기도 하다.

현재 동력자원부에서 추진중에 있는 에너지 정책은 그 기본목표가 소요에너지의 안전수급과 경제적 확보 및 이용의 조화로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되어 있고 그 주요 정책방향은 에너지의 안전공급 기반강화, 에너지 산업의 구조개편, 그리고 에너지 이용효율의 향상 및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 등으로 되어 있다. 또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에너지경제연구원, 석유개발공사 등도 각기 그 설립취지에 걸맞는 기본목표 및 정책방향을 세워 놓고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음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 항상 그렇듯이 모든 문제의 핵심은 그 근본적인 데에, 즉 精神, 哲學 및 이에 따라 나타나는 行動方式에 있는 것이다. 월남전이나 아프카니스탄의 전쟁에서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미국과 소련이 그토록 곤욕을 치른 것은 무엇때문이었는가? 가공할만한 현대전의 각종 첨단병기와 막대한 물량공급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실패만을 안고 물러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 것인가?

애시당초 열심히 할, 또는 하여야 할, 정신자세나 의지가 정립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좋은 지침과 첨단장비를 제공해도 그들에게 말긴 모든

일의 결과가 바람직하지 않으리란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될 것이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 즉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등의 산적한 문제와 마찬가지로 에너지 문제 역시 이 기본적인 정신자세나 기본의지의 결핍이 큰 문제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에 문제는 없는가? 없을 수야 없지만, 그런대로 동력자원부를 비롯한 관계기관들의 기본목표나 정책방향은 훌륭하다. 즉,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전의 문제(정신자세와 의지)가 문제인 것이다. 몇가지 예를 들어서 이 문제를 살펴보자.

동력자원부의 에너지 정책분야는 원래 상공부에서 일부국들이 떨어져 나와 구성되었으며, 주로 석유 등 에너지수급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정부부처중에서도 경제부처로 분류되고 이들은 직간접적으로 경제기획원장관의 지휘를 받게 되므로 어떻게 보면 경제기획원의 산하 부서처럼 보인다. 이는 역대 동력자원부의 장관들과 상공부 또는 경제기획원과의 관계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역대 동력자원부의 고위 관리들은 어떻게 보면 동력자원부의 관리가 아니라 상공부나 경제기획원 사람들같은 언동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그들이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정책목표나 방향과는 정반대로 산하에 광업진흥공사, 석탄공사, 석유개발공사 등을 거느리고 있으면서도(이들 기관장들의 사고방식도 대동소이하겠으나), 이들 기관들을 활발하게 활동하도록 하는 대신에 점차 그 활동과 사업을 축소 또는 위축시켜서 마치 하루빨리 이들 기관들을 없애버리고 동력자원부가 정식으로 상공부나 또는 경제기획원의 산하로 들어가 버리기를 원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어왔다.

세계 각국이 1, 2차 석유파동을 거치면서 자국의 석유 비축량을 120일, 180일분으로 대폭 강화시켜 갈때도 우리는 막대한 석유비축기금을 건어 놓고서도 비축사업의 확대에 투자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축적해 놓았다가 놓여온 부채 탕감이나 중소기업 자금융자 등 타부처의 사업에 대부분

뺏겨버리고 나서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바랄 것인가.

또한 노사분규가 많고 사고가 많은 탄광들을 위시한 각종 광산들은 하루 빨리 문닫아버리고 산하에 경제연구원들이나 거느리고 앉아서 부족한 자원은, 엄청나게 벌어들이는(?) 달러를 갖고 무역업으로나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국내 부존 자원 개발의 극대화 정책은 무슨 효과를 낼 것인가. 위험부담이 많고 공해가 많은 석탄이나 석유, 또 요즈음은 원자력보다도 깨끗하고 첨단적이고 신선한 이미지를 주는(비록 그 효율성이나 활용성으로는 말도 안되지만) 태양열, 수소, 풍력 등 신에너지 또는 대체에너지 개발에 더 큰 매력과 PR효과를 느끼는 이들에게서 무슨 새로운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개발도상국에서 갑자기 선진국으로 된 것처럼 착각에 빠져서 여러 분야에서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모든 상황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다는 것 또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아직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석유비축문제, 국내 에너지 자원의 보호 및 개발문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 아직은 이들 문제들을 그냥 적당히 대처해도 좋은 때가 아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선진국들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점을 정책관계자들은 깊이 반성하고 명심해야 한다. 이번 페르시아만 전쟁의 교훈도 아직은 에너지 문제를 소홀히 다룰 수 없다는 것일 터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페르시아만의 전쟁도 언젠가는 수습이 될 것이고 그러면 1973년, 1979년의 1, 2차 석유파동 경우처럼 떠들석하던 정부의 각종 에너지 긴급시책들도 점차 해제되어 또다시 망각의 늪으로 빠지겠지만, 바라건대 앞으로는 동력자원부를 위시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기관들이 독자적 존립의의를 회복하여 당초 설립취지대로, 정책방향대로, 굳건하게, 지속적으로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정책을 수행한다는 기본철학과 자세를 가다듬어 주었으면 한다.